서울시, 정보화 사업 1158개 3626억 투입

"공공와이파이 4475대 설치… 모바일 접근성 개선"

사물인터넷 전용 네트워크 구축
민간 위주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기술활용 행정 혁신"

서울시는 올해 정보화 사업 1158개에 36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는 ▲시스템구축 91개(661억원) ▲전산장비 및 솔루션 도입 196개(583억원) ▲S/W개발 65개(136억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119개(451억원) ▲DB구축 22개(213억원) ▲컨설팅 16개(27억원) ▲유지관리 590개(1385억원) ▲정보화교육 등 기타 59개(170억원)이다.

시는 우선 '서울시 전역 공공 와이파이(WiFi) 조성' 사업(116억원)을 추진한다. 서울시내에 공공 와이파이 4475대를 설치해 시민들의 모바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교통·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신, 활용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전용 네트워크도 새롭게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공동 활용하기 위한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에는 인공지능을, 공공서비스 예약에는 챗봇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외에 내부행정의 개선을 위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행정국), 클라우드센터 정보자원통합 구축(데이터센터), 빅데이터연구센터 슈퍼컴퓨터 서버실 구축(서울시립대학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로 민간 기업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할 경우 3807개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2017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전산업 취업유발계수는 10.5명이다.

시는 정보화 사업의 상세한 사업계획과 발주일정을 기업과 시민에게 사전 안내하는 '2020년 서울시 정보화 사업 발주 정보 홈페이지'를 선보인다. 중소 ICT 민간 기업에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 추진 예정인 1158개의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스마트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오토이미지

10개월간 지역기업서 근무… 월 220만원 지급

서울시 청정지역 프로젝트
직무역량 강화·임직원 멘토링

서울시는 지방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며 지역 기업에서 일할 '청정(靑停)지역 프로젝트' 참가자 300여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청정지역 프로젝트는 서울청년의 다양한 일자리 경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00여개 지역기업에서 주 4일(주 32시간) 근무하고 주 1일(주 8시간)은 지역주민과 교류하며 사회공헌활동을 하게 된다. 청년들은 월 220만원(세전)의 급여와 기업별 복리후생제도를 제공받는다. 이밖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 제공되고, 현대백화점그룹 임직원들로부터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청정지역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포스터.
/서울시

모집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시작된 청정지역 프로젝트는 올해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부산, 울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확대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 청년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교류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는 상생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 가동… 심리 상담지원

감염증 등 스트레스 장애시 도움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도민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체계적인 질병 확산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을 가동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재난심리지원단은 도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70명과 센터 상근종사인력 630명 등 700여명으로 구성돼 도 내 재난 발생시 도민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불안감, 불면증, 우울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심리상담이 가능하며, 대면상담 방식으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심리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례관리 서비스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박완희 기자 wanhee@

한산해진 명동지하쇼핑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 9일 서울 중구 명동지하쇼핑센터가 휴일임에도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노후어린이 차량, 친환경車 전환시 500만원

서울시 예산 15억 투입 보조금 지원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서울시가 노후 어린이통학차량을 친환경차량인 LPG차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전환 목표 차량대수는 300대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이 LPG(액화석유가스)차로 전환된 차량대수는 399대이다. 2017년엔 206대, 2018년엔 120대, 2019년엔 73대 등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됐다. 시는 올해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 300대를 LPG차량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미 시가 받은 사전접수 결과 예비신청자 169명이 지원한 상태다.

현재 서울 관할시설에 어린이 통학차량은 4716대로 집계됐다. 이 중 15인승 이하인 소형 경유차량은 1966대로 42%를 차지했다. 9년 이상 등록 경과된 차량은 545대(11%)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예산 15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한 후, LPG 신차로 구매하면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어린이들이 줄지어 선 학원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는 통학차량 소유자이다.

시는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PG 차량의 경우, 구입비용이 경유차량 대비 약 800만원이 저렴하다. 15인승 이하전기차량의 경우 외국산 2종 등 차종은 다양해져 소비자 선택의 폭은 확대됐으나, LPG 차량보다 비용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영상 창작자 찾습니다"

서울시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상 창작가를 대상으로 '제5기 서울영상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서울소재 직장, 학교에 다니는 서울생활권자이다. 영상제작이 가능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격으로는 본인 유튜브 계정 구독자 수 2000명 또는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20000명 이상이면 된다.

서울영상크리에이터는 2016년 1기를 시작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서울의 정책과 생활정보 등을 개성 있게 영상에 담아 총 346편을 개인채널, 시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단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에 선발될 서울영상크리에이터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작 선정 추가 상금, 서울 브랜디드콘텐츠 제작기회 부여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김현정 기자

마스크·손소독제 인터넷 쇼핑피해 소셜커머스·오픈마켓서 76%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주문을 판매업체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거나 사전 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 두절되는 인터넷 쇼핑 피해의 76%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10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마스크와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약 70건이다.

소비자 피해사례는 ▲'배송 예정'이라고 안내한 판매업체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 ▲사전안내 없이 배송 지연한 판매업체의 연락두절 ▲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일부 수량만 배송 등이었다.

/김현정 기자